

직업교육혁신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의 발전방향 -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하여 -

김 호 동
동양공업전문대학

A Direction of College Education Prosperity via Innov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 As for the Times of Coexistence with Crises and Opportunities -

Kim, Ho Dong
Dongyang Institute of Polytech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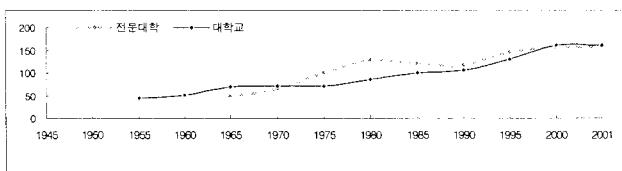
Abstract - 대학의 위기 시대에는 기회가 동시에 오는 것 이므로 전문대학 발전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가가 생존의 열쇠이다. 본고에서는 전문대학의 직업교육혁신 방안으로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대학 교육혁신의 이념적 바탕은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에 있고 이는 고등교육법에서 제시한 전문직업인의 개념의 해석에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전문직업인의 정의를 확고하게 설정하고 이에따라 직업교육체계 혁신, 전문대학의 기능혁신, 전문대학 교육의 질혁신, 직업교육의 문화혁신, 전문대학 경영 혁신 등을 이루어 나갈 때 전문대학의 생존은 수요자와 사회를 위하여 가능한 것이다.

1. 서 론

1.1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후 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이어져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등의 교육지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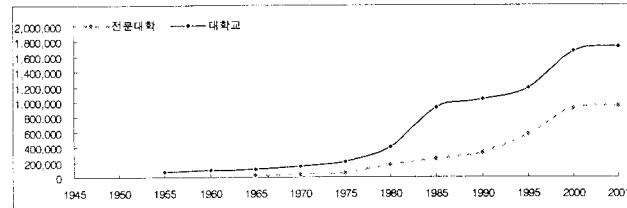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의 수는 1945년의 3,000개에서 2001년 현재는 19,058개로서 약 6.4배 증가하였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27개교가 증가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전문대학의 수는 1965년 당시 48개교에서 1980년 128개로 증가하였고, 이후 1990년까지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5년 이후로 학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에 158개교가 되었고, 2002년 현재 1개교가 신설되어 159개가 되었다. 이 시기에 4년제 대학수도 1965년에 불과 70개교이었던 것이 1985년에는 100개교로, 2001년에는 162개교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1> 학교수의 변화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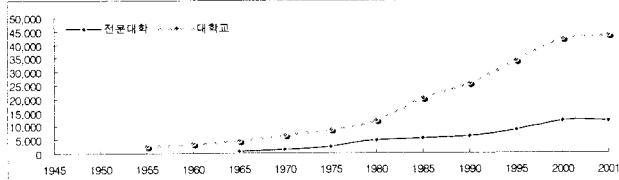
또한, 1945년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 학생수는 약 145만명이었으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1980년에는 1천만명을 돌파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 학생수는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1년에는 11,936,39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945년에 비해 8.2배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2>와 같이 전문대학 학생수는 1965년에는 23,159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952,649명으로 약 41배 증가하였다. 4년제 대학 학생수는 1965년 105,643명에서 2001년에는 1,729,638명으로 16.4배 증가하였다.



<그림 2> 학생수의 변화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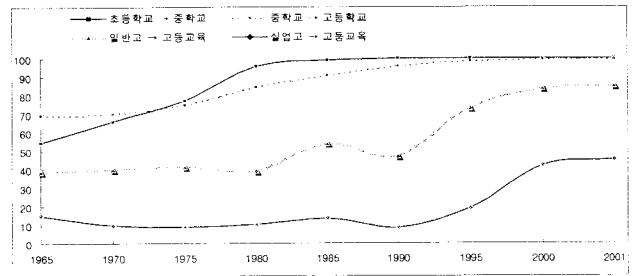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교원 수는 1945년 20,915명이었으나, 이후 학교수와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1년 현재 433,61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945년에 비해서 약 20.7배 증가한 것이다. 전문대학 교원수는 1965년 771명에서 2001년 교원수는 11,897명으로 15.4배 증가하였고, 4년제 대학 교원수는 1965년 4,544명이었는데 2001년 43,309명으로 9.5배 증가하였다.



<그림 3> 교원수의 변화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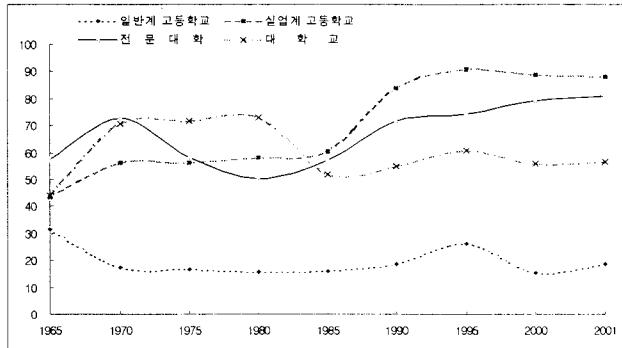
한편, 고등교육 진학률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2001년 현재 고등학교 전체 졸업자의 70.5%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실정이고 이중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1965년 당시 38.6%였으나, 2001년 현재 85.2%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1965년에 14.9%였으나 1980년에는 10.1%로 감소하였다가 1990년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현재 44.9%이다.



<그림 4> 진학률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에 57.5%였으나 1980년에는 50.3%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 큰 변화 없이 70%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1년 현재에는 80%가 약간 넘고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1.6%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 44.0%에서 1970년에는 70.6%로 급증하였으나, 1985년 52.1%로 급감하였고, 그 이후로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1년 현재 56.7%로서 전년도에 비해 0.7% 증가에 그쳤다.



<그림 5> 취업률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표 1>과 같이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학 졸업자보다 많고 특히 공학, 의료, 가정, 예술 분야의 인적자원을 대학보다 많이 배출함을 알 수 있다.

<표 1> 고등교육기관 전공계열별 학과수 및 졸업자 현황(2001)

구분	전문대학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합계
	학과수	졸업생수	학과수	졸업생수	학과수	졸업생수	졸업자수	졸업생수	
어문학	237	10,212	946	23,503					33,715
인문학	6	163	564	8,894					9,057
사회계	1,157	56,051	2,314	56,749					112,800
이학	110	4,320	966	21,172					25,492
공학	1,172	80,063	2,169	51,673					131,736
농림학	53	2,197	256	5,179					7,376
수해양	9	189	49	680					869
가정학	359	14,218	264	6,842					21,060
의학	264	19,170	274	7,662					26,832
약학		66	1,540						1,540
예술학	658	23,276	782	14,104					37,380
체육학	132	3,683	216	4,100					7,783
사범계	138	9,947	511	12,400	14	5,233			27,580
							13,153		13,153
합계	4,835	223,489	9,377	214,498	14	5,233	13,153		456,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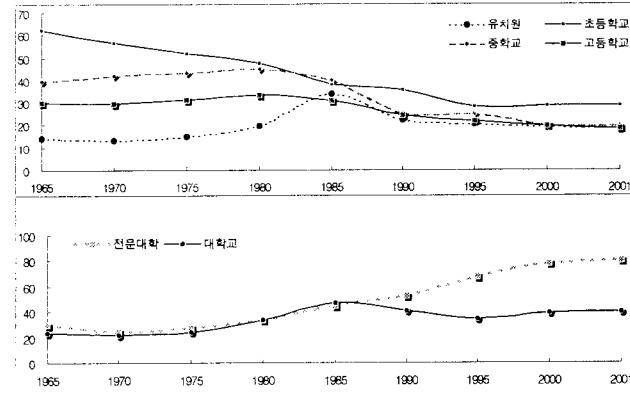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2).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보도자료.

1.2 전문대학의 위기 요인

1970년 당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13.4명, 초등학교 56.9명, 중학교 42.3명, 고등학교 29.7명이며,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았으나, 30년 여 년이 지난 2001년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18.8명, 초등학교 28.7명, 중학교 19.6명, 고등학교 18.3명으로 줄어,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다. 또한 4년제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65년 23.2명이었으나, 1985년 47명으로 절정에 이르렀고, 이후 잠시 감소하다 1997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1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39.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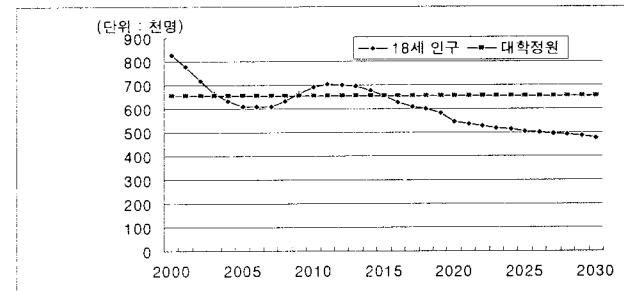
그러나 <그림 6>과 같은 각급 교육기관의 교원 1인당 학생수 변화추이와는 달리 전문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65년에 30.0명이었으나, 1990년 52.7명, 2001년에

80.1명으로 증가하여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림 6> 교원 1인당 학생수

또한 <그림 7>과 같이 2004년에 이르면 대학입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630천명)가 현 대학정원(655천명)보다 더 적어지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현 대학 정원의 7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입학자원 확보를 위하여 대학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7> 대학 입학자원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2),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II-참고자료, 3쪽.

한편, <표 2>와 같이 2000년도 고졸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전문대졸」 임금은 103.4 수준으로 '95년의 116.7에 비하여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고졸자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취업자가 줄어들면서 고졸자의 직무를 전문대 졸업자가 담당하는 하향취업에도 기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계열별로 많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전문대학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실증적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학력별 임금수준 (단위 : 천원, %)

	'95	'97	'98	'99	2000
중졸이하	408 (87.7)	924 (88.5)	911 (87.5)	967 (88.8)	1,042 (87.8)
고 졸	465 (100.0)	1,044 (100.0)	1,040 (100.0)	1,089 (100.0)	1,186 (100.0)
전문대학	543 (116.7)	1,107 (106.0)	1,109 (106.6)	1,126 (103.4)	1,226 (103.4)
대졸이상	812 (174.6)	1,520 (145.5)	1,550 (149.0)	1,651 (151.6)	1,789 (150.9)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또 하나의 위기 요인으로서 이공계 기피현상을 들 수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젊은 세대들의 경향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직업교육이 지

향하는 바 현장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대학 기관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과거에는 과감한 이공계 우대책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이것이 고도성장의 견인차로 작용하였지만 현재 선진국 산업인력과의 질적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규모까지 줄어들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가 고도화되고 있어 인적자원 특히 산업인력의 중요성이 자본, 기술 등 물적요소를 능가하는 상황이며, 생산성 증가 측면에서 시설 투자보다 인적자원 투자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시설투자를 10% 증액했을 때 생산성이 3.6% 향상된 반면 교육훈련투자를 10% 증액했을 때는 생산성이 8.4% 증가(21st century Skills for 21st century Jobs, 1999.) 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IT, BT, NT 등 신산업으로 주력산업 축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공계 고급인력과 산업인력의 육성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한 사람이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공계 산업인력은 국가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이다. 21세기는 '인재확보전쟁(The War for Talents)의 시대'(맥킨지컨설팅, 굽타 회장)이며 양질의 이공계 산업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향후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문대학의 위기론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전문대학의 발전전략을 탐색하여 보기로 한다.

2. 전문대학 교육의 정체성 확립

1996년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교육법 체계를 교육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으로 재구조화한 바 있고, 1997년 고등교육법 제정 당시에 전문대학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중견직업인이 아닌 전문직업인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제조업의 축소와 서비스 경제의 대두, 지식기반경제와 지식산업비중의 강화, 외부 노동시장을 중시하는 고용환경의 변화, 평생학습에 의한 지속적인 능력개발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해 과거 산업사회에서처럼 기능공, 중견직업인, 공학자 및 과학자 등으로 인력구조를 도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없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담당자나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내부에서조차 전문대학은 중견직업인 양성기관이라는 인식이 만연하여 전문대학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에 근거한 교육목적과 법 취지와 동떨어진 교육행정,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교육현실 등이 불일치함으로 해서 전문대학의 정체성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문직업인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2.1 중견직업인과 전문직업인

실업계고교에서 배출하는 인력을 기능인(craftsman), 산업대학이나 기술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을 기술공학자(technologist), 이공계 대학은 기술자(engineer), 대학원은 과학자(scientist)와 같은 인력수준을 배출한다고 할 때 전문대학은 기능인과 기술공학자의 중간 수준인 중견기술자(technicians)를 배출하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견직업인(technician)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새롭게 전문직업인이라는 용어를 고등교육법에 사용하면서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평생교육, 지역사회교육의 종주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을 보면 이는 중견직업인(technician) 뿐만 아니라 보다 상위의 인력인 공학기술자(technologist)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인다.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문대학 교육목적이 중견직업인 양성으로 규정하였던 1960년대를 전후한 산업사회

에서는 복제기술(dead copy)에 의한 모방제품의 생산과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였고, 전문대학 교육목적을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규정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적 과학·기술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구분	산업사회 (1960년대)	→	지식기반사회 (2000년대)
기술수준	복제모방기술 소품종대량생산	응용과학 실용공학 발달	창의적 과학·기술 다품종소량생산
산업형태	노동집약산업	기술집약 산업	지식기반산업
인적자원구조	박사 석사 학사 중급 전문대졸업자 초급 실업고졸업자	과학자 (Scientist) 공학자 (Engineer) 중견직업인 (Technician) 기능인 (Craftsman)	순수과학자 (Pure Scientist) 응용과학자 (Applied Scientist) 전문직업인 Technologist Engineering Technician Engineering Technician Technician 기능인(Craftsman)

<그림 8> 중견직업인과 전문직업인의 개념 비교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창의적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적자원의 구조는 중간기술인력 계층에 속하는 technician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기능인력의 비중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직업인이라 함은 중견직업인인 technician과 공학기술자인 technologist의 영역이 결합하여 5단계 이상으로 분화된 인적자원 계층구조상 전문직업영역의 다양한 계층에 속하는 인력을 말한다.

본래 전문대학의 설립취지는 직업교육을 원하는 모든 자에게 직업과 실제 생활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단기에 습득케하는 2년제 단기직업교육기관으로 각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료, 성직자 등)의 교육목적과도 혼동될 수 있으므로 '중견직업인'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학위를 전문학사로 수여하면서 설립목적을 중견직업인 양성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단지 산업사회에서 중간수준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어 목적을 변경하여 전문대학을 직업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을 중견직업인에서 전문직업인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교육수요자 및 공급자의 요구가 바뀌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을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새롭게 재정하여 교육영역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을 전문직업인으로 바꾼 이유는 디지털경제시대 및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서비스업 및 자영업의 증가로 인한 산업인력구조의 완화 조짐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전문대학을 직업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었다.

2.2 전문대학 교육의 정체성

전문직업인의 개념 정립이 미흡함에 따라 전문대학 교육목적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전문대학 교육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와 정책(각종 예산지원사업 포함) 역시, 과거의 규제방식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구성원의 노력 역시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진하게 되어, 이는 결국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을 중견직업인이 아니라 전문직업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문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져야 한다.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 연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48조에서 전문대학을

고교 졸업후 2년 내지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검토되어 져야 하는 것이다. 전문직업인이 인적자원구조상 적어도 4개 계층으로 분화될 수 있다면 전문대학 교육 자체만으로 4단계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기능인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기존 전문학사과정, 전문학사과정 이수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advances course) 또는 학사과정 전문대학(senior vocational college)의 학사과정, 그리고 학사과정 이수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전문·특수대학원의 전문 석·박사과정 등을 산업체 근무 이후에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순환적 교육체제의 구현을 위하여 필연적인 성인 학습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학습체제의 중추 기관으로의 역할 확대가 절실히다. 따라서 전문대학 중심 순환형 계속교육체제 구축 등의 체제혁신, 다양한 교육과정의 설치·운영 등의 기능혁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설치·운영 등의 질혁신, 직업교육 문화창달 등의 문화혁신, 재정구조의 건실화와 경영평가제 도입 등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전문대학 교육혁신(education innovation)이 필요한 시기이다.

3. 직업교육체제 혁신

정부가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와 직업·기술교육 이수자의 계속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직업·기술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고 신분상승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3.1 2년제 학사과정 전문대학 설치·운영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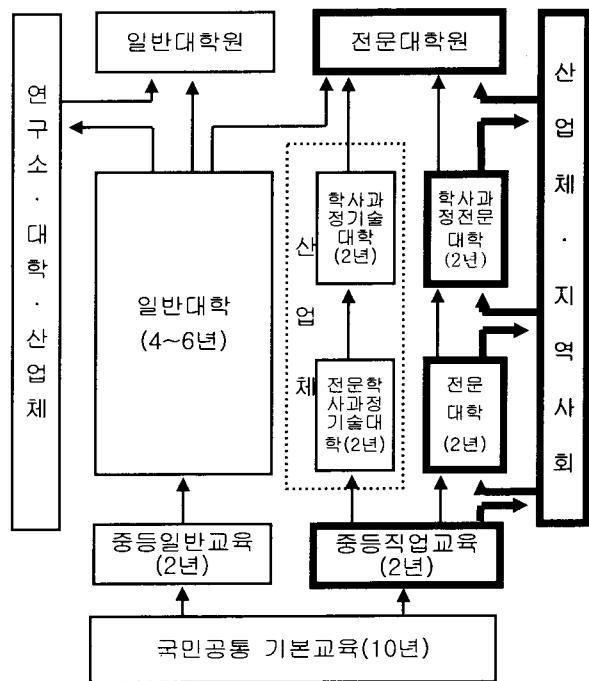
일본의 기술과학대학이나 우리나라 기술대학 제도처럼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만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고등교육기관을 SVC(Senior Vocational College)라고 부르기로 한다.

단선형 교육체제하에서 2년제 단기고등교육이 갖고 있는 계속교육기회 부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여, <그림 9>처럼 전문대학 2~3년, SVC 1~2년, 전문대학원 2~3년으로 이어지는 계층구조의 학제를 완성해 볼 수 있다. 이상 언급한 3단계 고등직업교육기관은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여도 되지만 인접한 단계의 2개 교육체제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본다. 예컨대 전문대학+SVC(2+2년제), SVC+전문대학원(2+2년제) 등의 장기 고등교육기관도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2) SVC 설치·운영 방안

- 설립목적 :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 제공
- 입학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동등학력 소지자
- 수업연한 : 1년(3년제 학과 출신)~2년(2년제 학과 출신)
- 설립주체 : 전문대학·(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 교육과정 :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과 전공심화를 위한 직업교육과정
- 졸업학점 : 40(1년제 학과)~80학점(2년제 학과)
- 학위 : 학사학위
- 설립·운영기준 :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적용되며 기존 대학의 전환을 유도하기 경과규정 적용(수익용재산 등)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국가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분야(정보기술, 생명공학, 기간산업 분야 등)를 위주로 하되 타 계열에도 점차 확대함. 기존 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기존 대학의 입학정원을 출

여 두 학교의 편제정원을 당초 인원만큼 유지하도록 함 (예: 편제정원 1,000명인 기존 전문대학이 전공심화과정 대학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는 두 대학의 편제정원을 합하여 1,000명을 넘지 않도록 함)



<그림 9> 순환형 직업교육체제 모형

(3) SVC의 3가지 유형

SVC는 다음 <표 3>와 같은 3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3> SVC 유형의 종류

제1모형	제2모형	제3모형
-독립 교육기관으로서 모든 학교법인이 설립 가능 -대학의 장이 학위수여 -대학설치운영규정을 적용되며 기존 (전문 또는 산업)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1학년 입학정원을 감축한 만큼 3학년 정원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동규정의 적용을 유예함	-전문대학에 1~2년제 학사학위과정 설치 -대학의 장이 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의 학제화 방안 -과정인가를 위한 별도의 심의 및 평가가 필요함 -기술대학 모형 -정원외	-전문대학에 1~2년제 학사학위과정 설치 -제2모형과 학위수여권이 제3자에게 있다 는 점이 다른 -학점운행제와 제3자에게 학위수여권이 있다는 점은 같으나, 단일 대학의 과정이 수 만으로 학위수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다름 -일본 고등전문학교나 단기대학의 전공과 모형

(4) 2년제 학사과정 전문대학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첫째는 직업교육체제(학제)의 완성(실업계고교 2년 + 전문대학 2년 + 전공심화과정대학 2년 + 전문대학원 2년)으로 직업교육의 위상이 정립되고 각급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계속교육 통로가 보장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고교 졸업자의 전문대학 진학에 대한 매력으로 작동하여 실업계고교 및 전문대학 입학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로는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한 실업계고교 교사 및 전문대학 교수의 양성이 가능하다.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교사나 기능대학 교수의 양성 및 재교육기관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설립·운영되고 있고, 일본도 기술과학대학 체제를 도입하여 고등전문학교 교관을 양성

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to-work)과 직업세계에서 학교로의 이행(work-to-school)을 원활히 하여 입직연령을 낮추고 전직 재교육이 자유로운 순환교육체제(recurrent education system)를 구축함으로써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등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데 편제정원(총정원)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전공심화과정대학을 인가하여 줄 경우 입학정원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고졸 혹은 전문대졸 성인학습자의 유치 경쟁을 통하여 졸업후 바로 진학(고졸→대학, 또는 전문대졸→대학편입)하려는 입시 경쟁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4. 전문대학 교육 기능혁신

전문대학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에 제시한 바 전문직업인 양성의 기능을 다하려면 전문대학 교육영역의 확대와 기능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교육의 기능혁신이란 교육대상의 다양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연한의 다양화를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의 평생교육·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4.1 전공심화과정 및 3년제 학과 활성화

(1)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학점인정

2년제 학과의 전공심화과정은 3년제 학과 확대정책 차원에서 학위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대학 졸업생의 계속교육을 위한 전공심화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는 최대 40학점(1년기준)을 평가인정절차 없이 당연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전공심화과정이 비학위과정으로 되어 있으나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운영에 따른 제도정비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의 직무능력 및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과 동등함으로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응시자격을 재학 중에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년제 학과 졸업생이 4년제 대학에 동일계 학과에 편입학할 때 1년이내 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재해석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이 120학점을 인정받고 국가기술자격(산업학사 이상) 1개 이상을 취득하면 학점환산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이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취득시 18학점 이상의 교육훈련과목 이수를 의무화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재해석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

4.2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학습체제 구현

(1) 평생교육·학습 체제로 재구조화

학령기 학생중심의 종국교육 체제에서 성인의 계속교육과 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생교육·학습체제로 전환하여 다양한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대학 구성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의식 제고와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의 연계운영 및 학습자간의 차별 철폐를 과감히 시행하여야 한다. 시간제 등록 활성화를 위한 학점당 등록제와 연중 수시 학생모집 전담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학점인정과정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습자 관리에 있어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운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2) 학령인구 외에 다양한 잠재적 교육수요자를 위한 장·단기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가정주부·직장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이 비교우위에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 재직 근로자의 향상교육, 전직교육, 실직자의 재취업 교육 등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노동부의 고

용보험제도 활용방안 강구한다. 전문대학 졸업생의 리콜 교육 및 대학 졸업자의 전직교육, 재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3) 학원과 직업훈련원 등 제도교육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전문대학내의 프로그램으로 수용하여 적극 개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유연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체 경력교수 우대와 정기적인 교수 산업체 연수실시 의무화한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장지향성과 경쟁력 제고한다.

4.3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산적 교육복지 구현

(1)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재소자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재소자 위탁교육 등 생산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 노인의 정보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치·운영

고령자 및 정년퇴임자 등과 같은 비경제활동인에 대한 재취업 및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노인세대와 청소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버넷(silver-net) 운동을 강화한다.

(3) 사회봉사 동아리 육성을 통한 사회통합과 박애 정신 고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대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배양하도록 사회봉사 동아리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한다. 한편,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전문직업인이 되도록 인성교육 강화한다.

4.4 직업교육·훈련기관 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 강화

(1) 실고+전문대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실고졸업자의 계속교육 강화

전문대학과 실고간의 연계교육과 실고생 특별전형은 직업교육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입학자원확보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며, 입학자원확보가 용이한 수도권 전문대학들은 참여율이 저조하고 확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축을 형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교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실질적인 연계활동 강화와 특별전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교재개발·시설활용 등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강화하여야 하고 주말과 방학을 활용하여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간의 상호교류 프로그램 제도화하여야 한다. 실고·전문대학연계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계교육 담당자 연수, 워크숍 강화하고 연계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하여야 한다. 제조업 관련학과의 연계교육생에게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되어야 한다. 실업계고교 이수과목의 학점인정과 조기졸업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연계교육기관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한다. 정부에서는 연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대학 중 매년 일부 전문대학에 한정하여 당해연도만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계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에 계속지원 필요가 있다. 실업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를 지도 관할하는 지방교육청에도 재정지원을 유도한다.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의 축을 구축하여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문교육과 같이 직업교육의 축을 구축함으로써 재능 있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소신 있게 지원하고 실업계 고교의 지원자 감소에 따른 위기도 해소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2) 기능대학 및 직업훈련원 등과의 연계강화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사내직업훈련원, 그리고 (사내)기

술대학 등과의 컨소시엄으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직업훈련기관과의 교수교환 및 시설·설비 정보제공, 공동으로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한다.

4.5 청년실업 감소를 위한 대졸자 취업교육 강화

학사과정 전문대학(SVC) 제도를 도입하여 대졸 미취업자가 SVC중 취업이 유망한 학과에서 직업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비를 정부에 요구하는 교육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한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불일치 문제의 해소는 고등교육기관을 소수의 연구중심대학과 다수의 직업·기술중심 대학으로 개편하는 데 있으며, SVC 등과 같은 전문대학의 계속 교육기관은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중요한 수단임을 정부에 촉구한다.

4.6 직업·기술교육의 세계화 추진

(1) 외국 학생자원 유치 확대

학생자원 감소에 따라 지방 전문대학의 자생력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도산은 막대한 교육시설 투자의 손실과 지역사회 기반의 붕괴로 사회문제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국과 같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발전 과정을 겪고 있는 나라의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해외 박람회 개최, 그리고 대학에서 유치한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숙사, 어학원, 교육과정 개발 등 대학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학원 등의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예비학부 운영과 실무 교육과정 개발, 졸업 후 취업을 보장 할 수 있는 진로지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은 1가정 1자녀 정책과 소득향상으로 고등 교육수요는 폭등하고 있으나 중국내 대학시설은 제한되어서 해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거리가 가깝고 같은 유교문화와 비슷한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학생 유치의 가능성이 많다. 위장 취업의 우려가 있다면 등록금을 예치하고 입학시키거나, 국내 중소기업의 근로자로 입국하여 주간에는 근무하고 야간에 전문대학에서 산업체위탁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주문식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중국내 한국기업에 근무할 중국인을 유학생으로 한국의 전문대학에 유치하여 졸업 후 중국내 한국기업에 취업시키는 방법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2) 직업·기술교육 봉사단 해외파견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 직업·기술교육봉사단을 파견하여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전문대학의 해외 진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 UNESCO 국제교육협력단과의 공조체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직업교육·훈련 부문의 선진 외국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추진한다.

5. 전문대학 교육 질혁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육시설·설비 등의 혁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와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교육에 경영관리기법의 하나인 품질 관리(quality management)와 품질 인증(quality assurance)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문대학 직업교육 질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현장의 내적 변화를 통하여 양질의 현장실무형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5.1 수요자(학생, 산업체) 중심의 교육과정 설치·운영

(1)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의 활용확대 및 DB 구축

교육과정 개발시에 산업체 직무분석을 철저히 하고, 교수설계·자격출제기준 연계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미국·영어권 국가들이 특히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연계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표준직무기준'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대학이 재정지원사업 이후 각 대학이 산발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과정·교재 매체개발을 하고 있으나 직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통합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적·물적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육내용과 자격검정의 출제기준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유도 발전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출제기준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훈련의 목표달성을 여부와 질 평가 수단으로서 교육부와 노동부가 협력하여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 개발·활용하고 있는 국가표준직무(national skill standard)의 도입이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제도의 운영이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그 기반이 되는 직무분석(job analysis)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직종별 직무분석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분석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활용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통합 관리기관은 주기적 직무분석을 수행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자격제도 운영기관은 이를 활용한다. 국가는 직종별 DB를 연계하는 통합 DB구축 및 관리를 한다.

(2) 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주문식 교육·훈련 강화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다양한 계열 및 전공코스 개발과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목표하에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훈련(customized training)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99년부터 전문대학에 주문식교육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주문식 교육 제도는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산업체와 전문대학의 주문식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나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으며 산업체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실이다. 전문대학을 바탕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지원의 한계로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주문식 교육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대학 주문식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을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대학은 내실 있는 주문식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여 직업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주문식 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3) 학제간 협동과정의 설치·운영

우리나라 12,000여 개나 되는 전문직업분야를 모두 학과로 개설하여 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나 사학으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의 현실로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 학과간의 학제간 협동으로 새로운 전문직업분야의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협동과정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협동과정은 연합전공이라고도 하며 복수의 전공이 융합(fusion)하여 동질성(homogeneity)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복수 전공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공업계열 학과와 어문계열 학과가 공동으로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공업기술인력을 양성하거나, 정보계열과 보건계열 학과가 협동하여 정보처리능력이 있는 의료보건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협동과정의 설치·운영은 입학자원 감소에 대비한 학과통폐합 방안과 병행하여 기존 학과들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창출이라는 학과 혹은 교육과정의 구조적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5.2 교육 인증제 및 졸업생 리콜제 도입

(1) 교육과정 평가인증제 도입

교육과정 평가인증제를 통한 교육품질 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소비자(사회, 산업체, 학습자 등)의 기대를 미리 예측하고,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맞춰 교육제도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보장시스템이 요구되고, 이 요구에 부응하도록 제도혁신, 즉 유연성 있고 적응력 있는 제도로 재구축이 필요하다.

교육품질 인증·관리의 과정은 교육제도의 변혁을 촉진 할 것이다.

전문대학은 교육의 질관리(quality management)를 위해 학습목표 관리체계(learning objective management system) 도입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교육목표 설정 → 전공의 학습목표 설정 → 교과내용 구성 →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의 적용 → 전공별 학습목표 및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여부에 대한 평가 → 문제점 발견과 대안 마련 → 차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수립 등으로 이어져야 하는 일련의 교육목표 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의 질보장(quality assurance)을 위해 교육과정 평가인증제(accreditation system) 도입하고, 우수 학생 배출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공인된 능력평가 시험 등의 성적을 출업 요건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정부는 전문대학 행·재정 지원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자료와 기준으로 활용한다. 공인된 자격증(예시: 시스코사의 CCNA, CCNP 등)과 전공 관련 공인 시험성적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2) 졸업 인증제 도입

졸업인증제란 대학들이 대외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보증하기 위해 재학중 각종 자격증이나 일정 수준의 어학능력 등 '1인1자격증'을 갖춰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성균관대학교의 삼품제 등을 비롯하여 4년제 대학에서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영진전문대학 등 전문대학에서도 졸업인증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대학 교육목적인 전문직업인 양성이 수업연한과 직무분야에 맞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져 목표달성이 되었는지의 여부 평가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소속학교 졸업시험과 졸업작품 등으로 검증하는 것은 대사회적 공신력이 떨어지므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는 어학시험(TOEIC, TEPS 등)이나 해당학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을 거쳐 일정 수준이상을 출업 요건으로 의무화 하여야 한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의 인증을 위하여 산업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한다.

(3) 졸업생 리콜교육 강화

취업을 하고, 미래의 고용주가 요구할 여러 가지 능력을 취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직업 재훈련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유망직종이나 자격요건의 변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평생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문화의 정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한 단기강좌 및 과정 개설하고 e-Learning 시스템을 이용한 졸업생 온라인(online) 재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5.3 학생과 교수의 현장성 제고

(1) 현장실습 학기제 도입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무능력 현장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 실습 학기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과목(1~3학점)을 한 학기간(6~12학점)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장실습 학기제는 1년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실시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학기제 및 현장실습 학기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지원 강화하여야 한다. 다학기제 및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대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수시입학 허용하고, 다학기제 및 현장실습 학기제 실시에 따른 교수들의 강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학기 교수연구

학기제 실시 권장한다. 실습학기제 운영기간 등을 활용하여 교수들의 산업체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승진시 산업체 연수 실적 등을 연구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학기제 및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사업무의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중소기업청 등 전문대학의 산·관·학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현장실습 업체의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히다.

(2) 교수 현장연수 학기제 도입

전문대학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대학 교수의 산업체 연수(6개월 이상) 기회를 확대하여야 gkse. 교수 신규임용후 일정기간마다 산업체 현장연수 6개월 이상의 실적을 의무화하고, 교수 현장연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현장연구 논문 발표를 의무화하고 우수 현장연수 교수에게는 인사 및 급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대학 교수 산업체 연수실적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기준에 확대 적용함과 동시에 산업체 연수를 위한 재정지원금액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

5.4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대학수준의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반 학습능력과 개인생활이나 직업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진입의 초기단계나 계속적인 학업과정에서 만족스런 대학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학업상담,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정보, 생애발달 프로그램, 진로지도, 대학생활상담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내에 전문대학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대학 교수·학습 지원서비스의 연구·개발·보급의 중심역할로서 전문대학 교육의 책무성과 수월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대학 교수의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체계적 접근 및 학생의 대학생활 성공을 위한 총체적 질 관리를 한다. 협력대학의 선정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한 우수 교수·학습 방법 경진대회 개최한다.

국가적 차원의 학습지원서비스 정책 수립하여야 한다. 대학수준의 기초학업능력 사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신체·정신 장애아를 위한 학업지원 서비스의 체계화하여야 한다.

대학간 교수·학습지원 협의체 구성 및 협력과 공유체제의 구축한다.

5.5 교육여건 개선

(1)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시설·설비의 지속적 개선

교육과정이 소프트웨어라면 교육 시설·설비는 하드웨어이다. 학습자에 대한 전문대학의 매력은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신의 교육 시설·설비인 것이다. 정부와 전문대학은 공동으로 항상 최신의 교육 시설·설비를 갖추어 학습자가 요구하고 산업체에서 만족하는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확보된 실험·실습기자재의 질과 양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기준에 확대 적용한다. 전문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을 위한 정부 출연금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대학실정에 맞는 적정 수준이상의 교수 확보율의 유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교육의 질은 교수의 역량에 달려있으며, 교수의 역량은 개인적 노력과 능력은 물론 연구 및 연수 활동을 통한 재충전에 달려 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 실용적 연구의 수월성을 위하여 등록생 기준 교수확보율을 적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열악한 전문대학 교수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행·재정지원이 절실히다. 전문대학 평가에 교수확보율 기준의 단계적인 제시가 필요하고 교수요원풀제를 활용한 정부의 인건비 보조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협력을 위한 연

구·개발 전담 교수제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실습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조교 및 연구조교 확보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문대학의 경우 조교 인원의 부족으로 실습교육과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수확보율과 함께 교육과 연구개발의 질적 개선 방안으로 조교(assistant) 요원의 확보가 시급한 것이다. 전문대학 조교 확보를 위한 정부의 행·재정지원이 절실히다. 조교요원풀제 및 대졸 실업자의 인턴조교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전문대학 조교 인건비 보조와 전문대학 조교의 조교경력을 교육·연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6. 직업교육문화혁신

직업교육에 의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인문중상의 우월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사회병폐적 학벌주의와 학력 차별화에 의한 비생산적 논쟁을 능률지향의 생산적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전문대학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소모적 경쟁보다는 상승적 협력이 위기의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로 하여야 한다.

(1)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문화창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단기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개별 대학의 단조로운 문화 행사는 이루어져 왔으나 전문대학 전체를 한 올타리로 하는 직업교육 문화가 없었으며 이로인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질 수 없는 실정이었다. 우리나라의 전근대적 사·농·공·상에 대한 직업에 대한 차별적 편견이 현재까지도 상존하는 가운데 직업교육 문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직업교육의 축이 전문대학에 있는 만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유사직업교육기관을 통괄하고 사회적 선도를 통해 생산적인 형태의 직업교육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사회적 직업의식의 편견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 각종 경진대회 활성화

전문대학,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능경진대회, 동아리 경진대회를 현재의 개별 대학단위간 행사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직업교육의 자긍심과 공인된 능력향상을 유도한다.

(2) 전문대학의 날 행사 및 참여율 제고

전문대학의 날을 정례화 하여 직업교육의 내용, 특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도모하고 창작품 및 각종 연구, 개발, 생산품의 전시와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각인시켜 나간다. 전국 단위의 정기 체육행사를 통해 직업교육인의 한마음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전문대학간 공동체육대회, 축제, 학생작품전시회,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3)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

입학자원의 부족에 따른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의 협조 체제를 통해 수도권 대학내 입시 접수창구에서의 공동접수를 확대운영한다. 입시 박람회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접수창구 공동 참여 행사를 추진하여 동질성을 제고한다.

(4)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해 생산적 사회풍토 조성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인적·물적 DB를 구축·운영하여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육목적 구현에 기여하여야 하며, 직업교육의 산실로서 교육·연구·개발·생산·판매에 이르는 “캠퍼스의 산업기술교육 단지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직업교육 문화를 개발하여야 한다.

전문대학 공동의 산학협력·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법의 개정과 중소기업기술협력회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의 교육용 시설의 생산적 활용을 위하여 수익사업 극대화를 위한 학교기업 운영을 권장하고, 학교기업의

별도 회계처리로 자율성을 보장한다.

6.2 직업교육 이수자의 기업고용 관행 및 인사제도 개선

(1)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대전환

직업교육의 경쟁력이 약한 것은 교육 이후 사회 진출 시 학벌위주, 학력 차별에 의한 사회적 차등 대우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능력과 직종의 성격에 따라 고용관행 및 인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 직업교육의 인식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졸업자가 전문직업인으로써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을 경우 4년제 대학 출신자와 동등한 기회부여를 줄 수 있는 인사제도 및 임금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학력, 학벌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양성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2) 기업의 고용관행과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인력채용 시장에 공개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지역별, 전국규모별로 마련하고 산업체 및 국민의 인식수준을 제고시킨다. 기업 및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및 경력자 채용시에 응모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출신자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대 구성원 스스로도 학벌보다는 자격과 능력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에 대한 믿음과 노력이 필요하다.

6.3 전문대학 홍보 강화

(1) 전문대학교협의회 산하 홍보위원회 활성화

전문대학을 비롯한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아직 까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직업교육의 우수성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내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홍보위원회 전문홍보위원으로 위촉 관리하고 전문대학 및 직업교육의 우수성과 비전을 상시 홍보할 수 있는 협력체제 유지와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2) 전문대학 지식·정보 포털사이트 운영

각 전문대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전문대학산학연네트워크 등 각종 전문대학 유관 웹사이트를 유기적으로 링크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개설·운영이 필요하다. 각 언론사 및 검색 사이트에 배너광고 등의 홍보와 전문대학이 담당하는 모든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식·정보 유통체제를 원활히 하여야 한다.

6.3 지방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1) 지방자치단체의 산학협력 지원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노동사무소, 교육청 등 관련행정기구 포함)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에 기여하는 대학 및 교수들을 지원하고 포상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산학협력사업에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낸 산업체와 대학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산학연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지방인재등용 포상제

지방 대학의 졸업자를 많이 채용한 기업체 및 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방인재등용 포상제를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날에 지방인재등용 단체 중 우수사례 발굴·표창하여야 한다.

7. 전문대학 경영혁신

학령인구감소와 대학시장개방 등 전문대학 교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전문대학 교육전반의 경영혁신과 자구적 구조조정을 수행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자생력을 보강하고, 사립전문대학의 건실화를 이루어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직업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7.1 전문대학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마다의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개편과 인력의 재편성 등 경영합리화 방안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고용구조 및 주변 산업수요인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취업 및 전문직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인력의 없으며, 학생정원에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으로만 생각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형태 및 기능의 도입, 경쟁력 있는 학과 및 교육과정의 개편, 교원의 교수 방법 등 직업교육 체질 개선노력의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적 경영 합리화 실천 방안의 미흡한 실정이다.

직업교육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대학 조직을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고 특히 학생선발부터 졸업, 졸업 후까지의 평생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학과의 개편에 따른 교원의 전공변경 유도를 위한 사전 시간적 기회 부여와 직업교육에 부합하는 체질 개선에 필요한 전문 연수의 강화 및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강화하여야 한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적 경영평가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정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차별화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해야 하여야 할 것이다.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주변대학간의 교수 교환제 및 교수요원풀제, 시설 공동운영, 학점교류 등을 통한 대학 운영 경비의 절감을 비롯하여, 유사학과(small deal) 및 대학 통폐합(big deal)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대학 경영자가 참여하는 범 자율적 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7.2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선

(1)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의 필요성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보조는 원칙적으로 교육투자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직업교육·훈련을 국가가 담당하는 지원 정책인바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경우 사학에 의존하는 비율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지원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문대학의 등록금이 4년제 대학의 70% 수준이하이고 등록금 의존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전문대학 재학생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재정지원금액에 있어서 일반대학과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전문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일반목적 지원사업(실험·실습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확대하여야 한다.

직업교육의 정체성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문대학 전체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속적·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사업계획의 수립, 신청, 평가 및 심사, 선정 등의 절차에 대한 시행령 등을 제정해야 하고, 재정지원의 목적을 극대화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보조금에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가의 정책기준 및 사후 평가에 대한 관리,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평가 운영의 지속성·합목적성·전문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상설 기구화 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의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지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예산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 또는 특성화를 지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학에 대한 보조금을 경상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조금 비율을 10~20%수준(현재 4.5%)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일반 4년제 대학과 달리 외부의 기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직업교육의 양성적 차원에서 공공요금 중 전기료와 수도료 및 전화료 등을 감면하여 등록금 인상요인을 흡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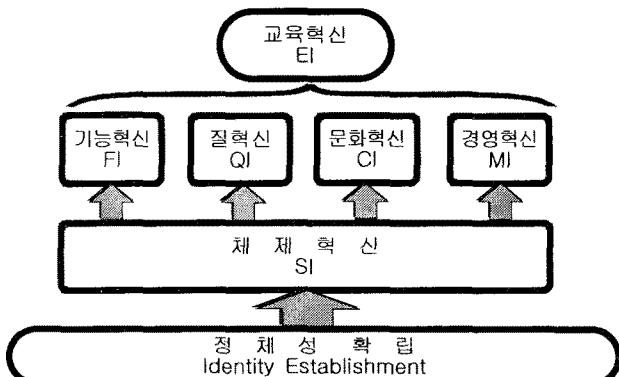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대학 자체의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 정부의 보조금이 시드머니(seed money) 성격이 될 수 있도록 대응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계획의 수립·예산집행·결산 및 평가 등의 절차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지원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실행-평가의 환류 과정을 엄정하게 자체평가 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서 오는 교훈을 동시에 얻어야 한다.

(2) 이공계 및 지방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이공계 기피현상에 따른 공학계열 전문대학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행·재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공학계열 전문대학 재학생의 장학금을 확대하고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공학계열 학과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전문대학 공학계열 졸업자에 해당되는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전문대학 공학계열 학과 재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전공분야 경진대회의 수준과 규모를 확대(대통령상 제정 등)하여야 한다. 지방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되, 권역별·지역별 평가기준을 차별화하여 지역적인 원인으로 자생력이 부족한 전문대학을 보육하고, 교육여건이 어려운 지방전문대학 중 적립금 비중이 낮은 전문대학에 한해 특별 보조금의 한시적으로 교부한다.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주민에 대한 평생학습 제공을 지방 소규모 전문대학이 담당하도록, 교육바우처(education boucher) 제도 시행 평생교육기관으로 선정·운영하여야 한다.

8. 결 론

위에서 제시한 체제혁신, 기능혁신, 질혁신, 문화혁신, 경영혁신의 5대 혁신과제를 달성하여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교육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혁신 과제의 연관성을 <그림 10>에 제시하였다.



<그림 10> 전문대학 교육혁신

[참 고 문 현]

- [1] 강무섭·김호동·정지선·황홍규,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직업교육체계 개편 방안”,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2001.10.
- [2]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보도자료, 2002.
- [3]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감 각년도.
- [4] 김호동, “순환형 직업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 교육정책워크샵, 2001.1.9.
- [5]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